

2024. 7. 26.급 | 09:30~11:5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생중계







- 1	÷ 11			
٠І	ОП	_	н	
_	0	正	N	

사회 **이 예 재** 국회방송 아나운서

1	개 회	9:30~9:45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식	개 회 사	김 현 곤 국회미래연구원장
9:30~9:50	축 사	우 원 식 국회의장
	사진촬영	9:45~9:50

좌장 이 규 연 미래학회장(前 JTBC보도담당대표)

2 발제 및 토론	기조연설	9:50~10:20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 김 태 유 서울대 명예교수
9:50~11:50	발 제 발제 1	10:20~10:50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연구위원
	발제 2	[넥스트디지털웨이브] 이 승 환 국회미래연구원연구위원
	토론	10:50~11:50 차 지 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 재 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변 미 리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장 한 성 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 전략연구소장 박 세 인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폐회	11:50

목 차

개회사	김 현 곤 국회미래연구원장	8
축 사	우 원 식 국회의장	10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	
기조연설	김 태 유 서울대 명예교수	15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발제 1	박 성 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9
	[넥스트 디지털 웨이브]	
발제 2	이 승 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39
토론 1	차 지 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3
토론 2	양 재 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59
토론 3	변 미 리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장	65
토론 4	한 성 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 전략연구소장	71
토론 5	박 세 인 한국일보정치부기자	79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축하와 격려를 위해 참석해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실 김태유 교수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규연 미래학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설립한 미래연구기관으로,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 분석하고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2018년 연구원 설립이후 지금까지 지난 6년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치개혁, 경제안보, 녹색전환, 인공지능 등 우리사회 16대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한 미래의제 보고서를 오늘 발간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도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넥스트 디지털 웨이브 대응〉등을 포함해서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논의하고 준비하는 구심점이 되어야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디딤돌이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국회의장 우 원 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우워식입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마련한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님, 국회의 미래 연구자로서 새 국회에 제시하는 의제들에 관하여 발제해 주실 국회미래연구원의 박성원 연구위원님과 이승환 연구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주실 이규연 미래학회장님을 비롯하여 토론을 맡아주신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님, 변미리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장님,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 전략연구소장님, 박세인 한국일보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2대 국회는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은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미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기후위기, 저출생, 지역소멸과 같은 국가적 난제의 경우에는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중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찾은 해법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고민하고 미래 대한민국 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 제22대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이를 정례화, 제도화해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저도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미래연구원의 제22대 국회 개원 기념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고견들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국회의장 우 원 식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기가 주목하다 할 기가 주목하다 할 기가 주목하다 할 기가 있다고 있다.

기 조 연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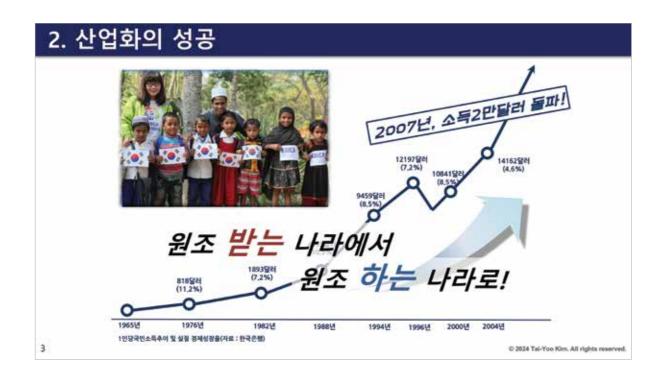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

김 태 유 서울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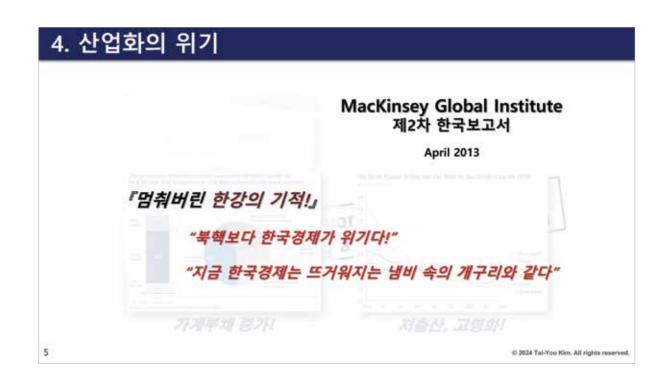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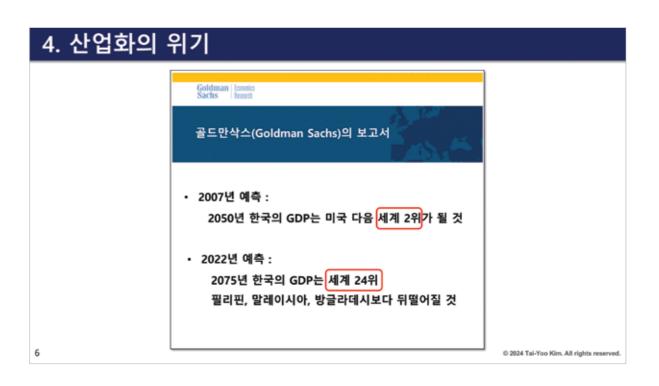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때난민국의 다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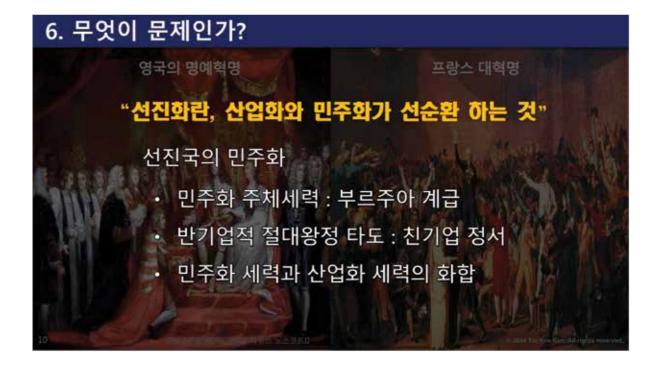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때난민중의 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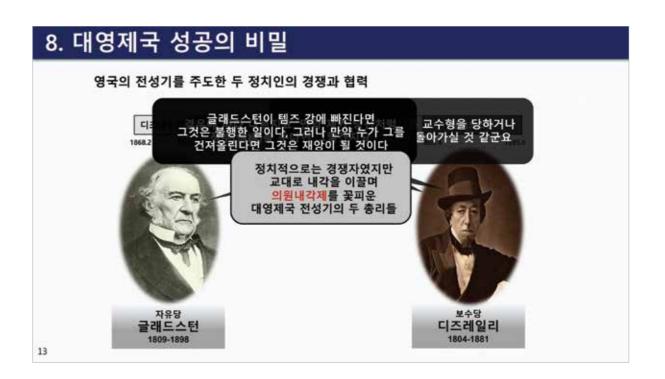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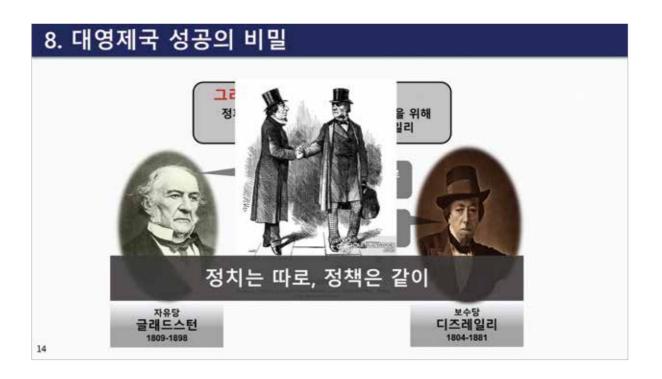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때 나인 중의 다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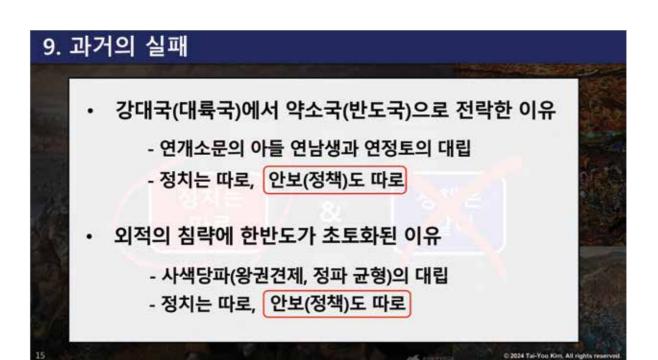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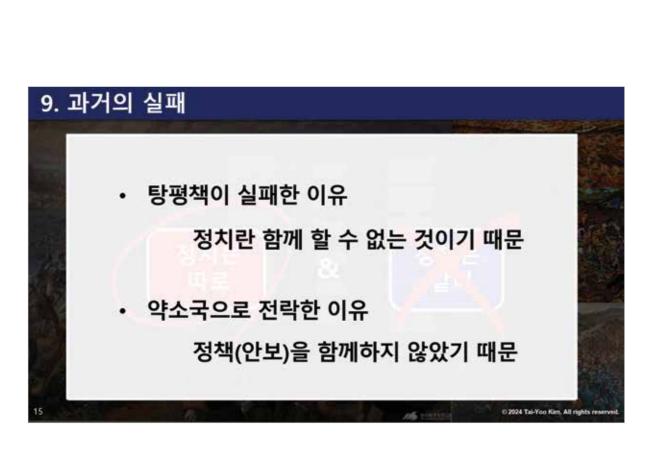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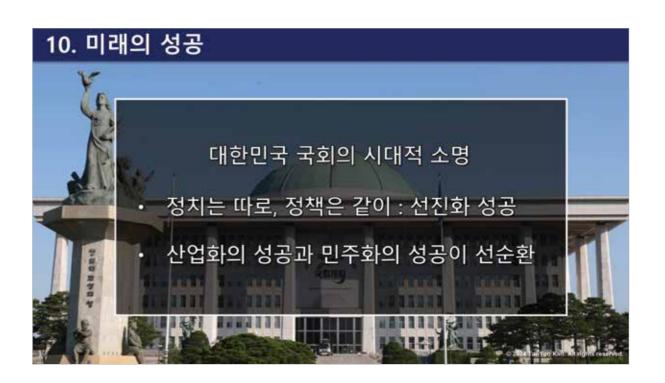
20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기가 주목하다 할 기가 주목하다 할 기가 주목하다 할 기가 있다고 있다.

발 제 1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박성 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발 제 2

넥스트 디지털 웨이브

이 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발 제 1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박성 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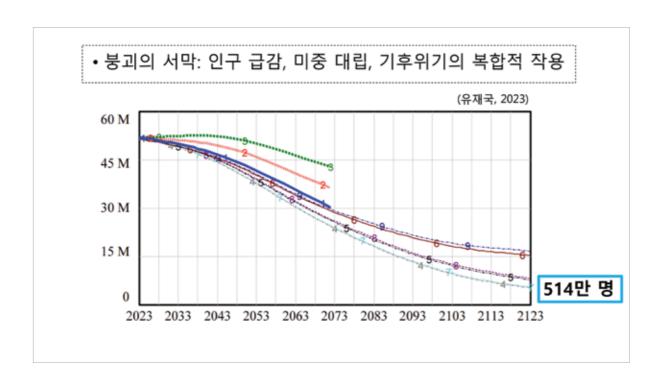
[22대 국회 개원 세미나]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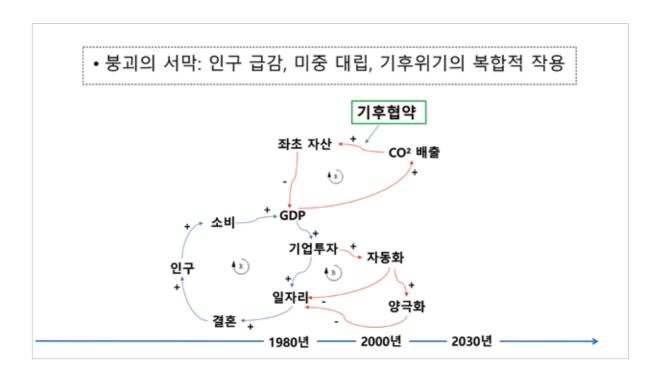
박성원, Ph.D. (미래학)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4년7월26일



핵심 요약

- 붕괴의 서막: 인구 급감, 미중 대립, 기후위기의 복합적 작용
- 낡은 사회 운영 원리: 국가성장→ 경제 가치 → 효율성, 능력주의 중시
- 국민은 개인의 성장 → 사회와 환경적 가치 → 형평성 강화 미래 요구
- 국회는 상설 미래위원회, 정부는 미래세대부 신설 필요
- 전국의 시민들과 상시 미래대화로 시민사회의 미래 대응력 향상





• 붕괴의 서막: 인구 급감, 미중 대립, 기후위기의 복합적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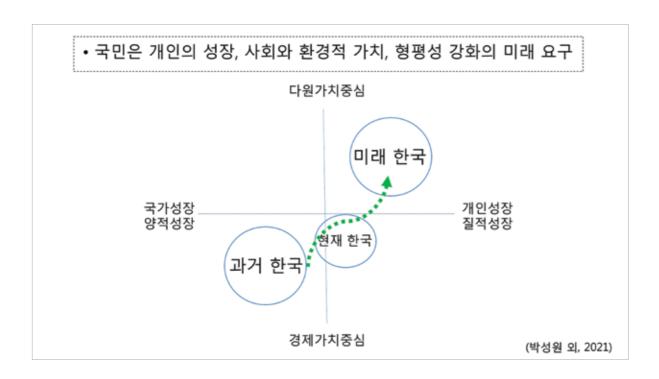
- 인구 급감 → 소비와 GDP 감소 → 기업 투자 축소, 자동화, 일자리 감소 → 결혼 감소
 ↓지역 청년의 수도권 쏠림 → 지역 경제, 사회 인프라 낙후 → 지역 초고령화
- 기후위기 심화 → 극한 기상 현상 → 경제 불평등 심화 → 갈등과 분쟁 → 국가 취약성
 ↓ 기후 이주민 증가 → 국가 취약성 → 식량, 연료, 물 부족

P · O·중 갈등 심화 → 중국의 대만, 미국 전쟁 → 한국, 전쟁 개입 → 한반도 붕괴

→ 해수면 상승 → 매개 감염병 증가 → 생물다양성 감소 → 생태계 붕괴

• 낡은 사회 운영 원리: 국가성장→ 경제 가치 → 효율성, 능력주의 중시

_______ 현국이 _____ 국가성장 개인성장 ______ 한국이 _____ 한국이 _____ 한국이 _____ 한국이 _____ 한국이 _____ 선택하지 않은 길 성장 ______ (박성원 외, 2021)



• 국민은 개인의 성장, 사회와 환경적 가치, 형평성 강화의 미래 요구

[표] 미래비전 2037의 비전과 지향 가치

비전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1. 국가 주도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
지향 가치	2. 경제성장 중심에서 다원 가치 중심
	3.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

• 국회는 상설 미래위원회, 정부는 미래세대부 신설 필요

<u> </u>	i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정부 미래세대부
정부의 미래전략 청취, 보완	지속가능 미래, 세대간 형평성
국민 선호미래 실현의 전략 제시	중장기 미래 대응의 정책 통합
상설 논의기구, 개원 직후 가동	각 부처 미래세대 담당관 참여
각 상임위원회,	인구, 교육, 복지, 기후, 기술, 주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참여	환경, 도시 변화의 복합 영향 평가
자문그룹 설치 및 운용	타 부처, 지자체, 시민사회와 협력
분야 융합형 소위원회 가동	세계 변화에 대응, 국제 협력 강화

• 전국의 시민들과 상시 미래대화로 시민사회의 미래 대응력 향상

미래 대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논의하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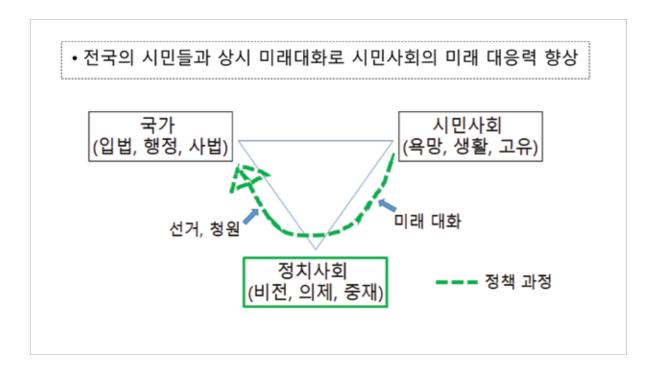
- 2013년 유럽연합은 유럽 시민의 해를 기념해시민들에게 유럽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미래 대화를 추진
- 2015년 53개의 시민 대화를 시작, 2016년 73개, 2017년 317개, 2018년 818개, 2019년 1200개의 미래 대화 시행
- 유럽 시민 26만명이 미래비전 수립 대화에 참여, 140만명이 이 대화를 지켜보았음

(박성원 외, 2023)

32

(김유빈 외, 2021)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레난 한국가 이 개 기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34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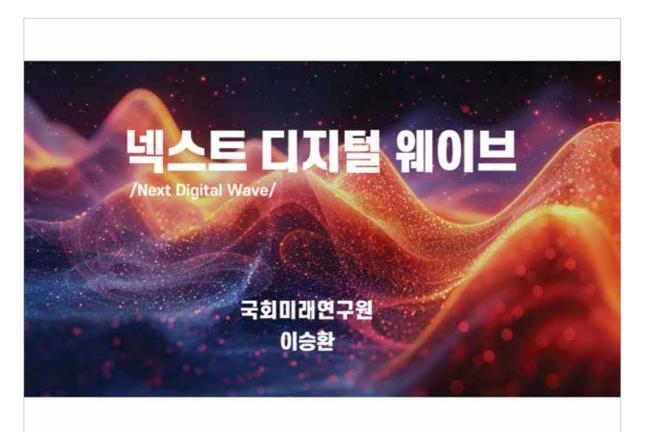
박성원 이메일 50000actio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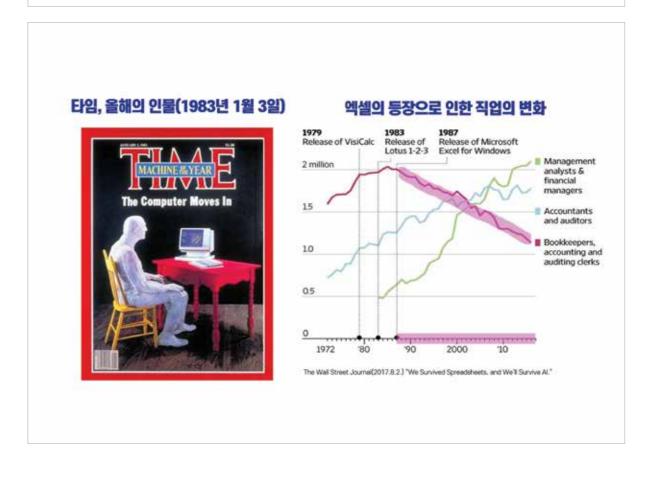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발 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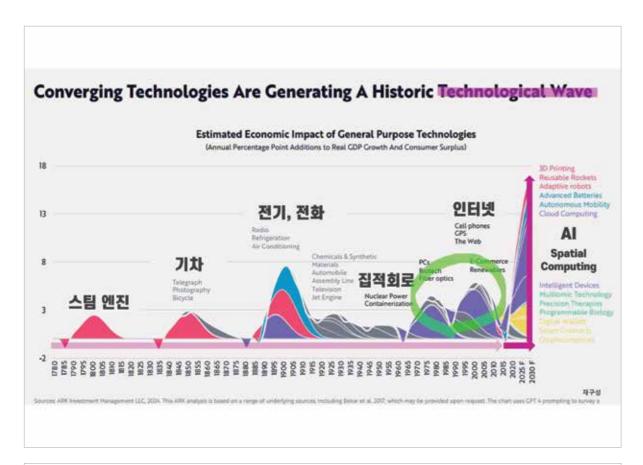
넥스트 디지털 웨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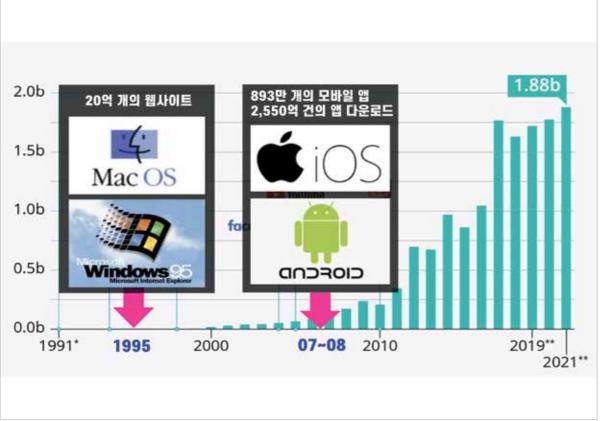
이 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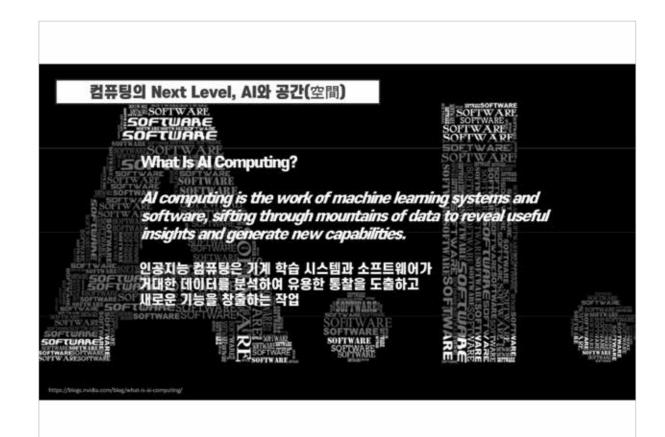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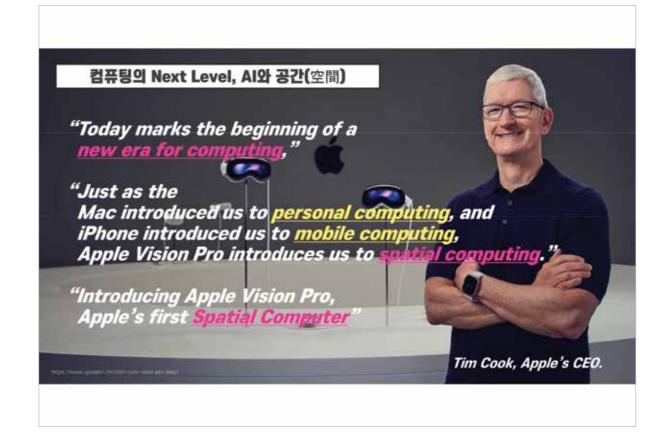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러났인중의 다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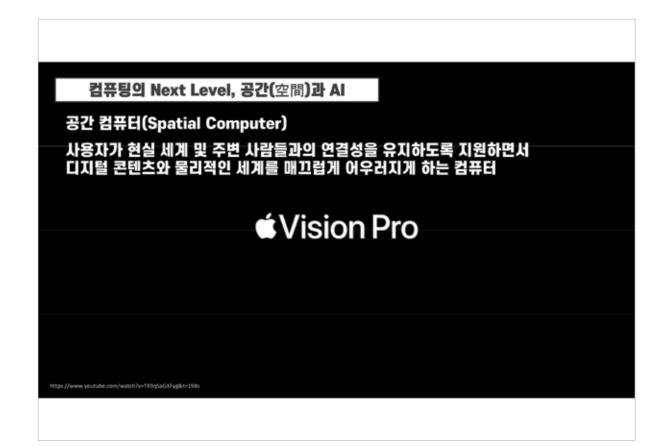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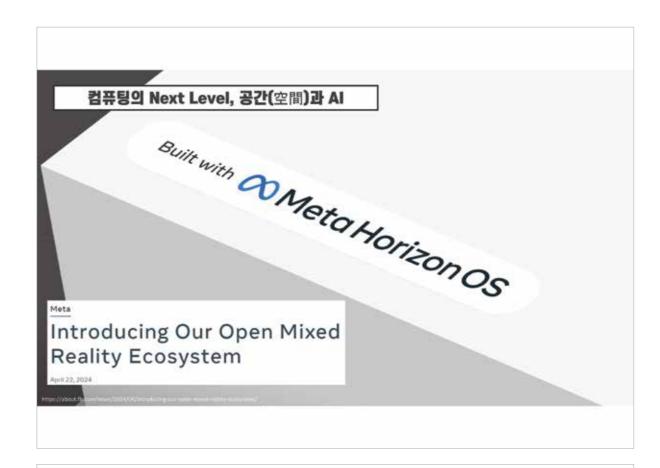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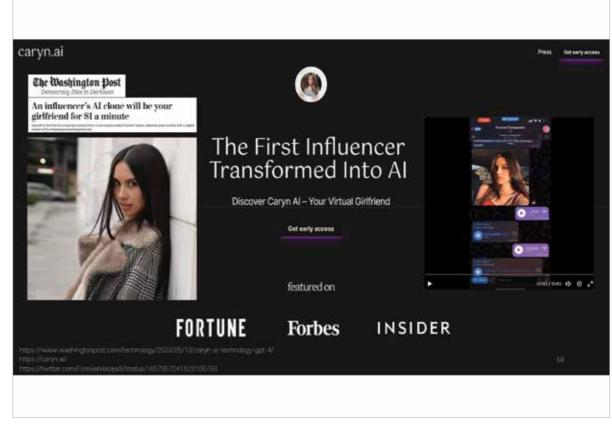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때문인중의 다 24





42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레보인하기 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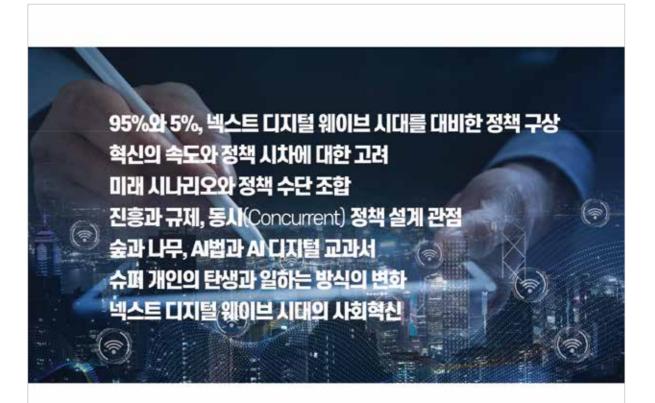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레보인하기 만 2세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기가 주목하다 할 기가 주목하다 할 기가 주목하다 한 기가 있다고 있다.

토

차 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 재 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변 미 리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장

한 성 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 전략연구소장

박세인 한국일보정치부기자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토론 1

차 지 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 비전으로 경쟁하는 정당 문화,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그리며

차 지 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오산)

글로벌 대전환 시기와 다중위기 적응

- □세계 주요 분쟁국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일수록 정치적 요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결과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도자의 오판이나 정치적 혼란이 국민과 국가 전체의 큰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 한편 특정 한 두 국가의 위기는 곧바로 주변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의 위기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개별 국가와 글로벌 이슈가 서로 의존적이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팬데믹과 다변하는 국제질서 하에서 세계는 이른바 초연결 사회로 꾸준히 진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 ■생각해 보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곧 맞이하게 될 미래는 그 속도와 성격 면에서 예전에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촉발한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 그리고 각종 분쟁, 기후 재난, 팬데믹과 같은 복합 위기가 일상인 시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미래였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현실화 되고 있는 다중복합위기 징후들은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필두로 소위 '글로벌 대전환 시대'가 열리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 위기 상황이 서로 연결되어 발생하는 '다중-복합 위기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른바 변화의 시기에 준비하고 적응해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국력을 의미하는 시대인 것이다. 민첩한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 불확실성 다루기, 미래전략 거버넌스, 국가적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이유이다.

미래 위기적응에 필요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 필요성

- □ 큰 물결과도 같은 미래변화에 한 개인이나 일개 조직이 개별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리더십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입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국가-기업 축으로 구성되는 우리 사회 전반에 뚜렷한 대한민국의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이다.
- □ 언뜻 막연할 수 있는 미래를 대상으로 한 국가 전략과 정책이 국민 삶의 곳곳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무쌍함에 대한 적응, 미래 복합 위기에 대한 적응 기제가 구체적인 국가 거버넌스 체계로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 이것이 대응 아닌 적응인 이유는,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분쟁, 재난과 같은 주요 위기 이슈들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맞닥뜨릴 상수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 □복합-다중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국민이 실감할 정도의 회복력(회복탄력성)이 강한 사회, 다중위기에 잘 적응하는 대한민국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국민한 사람한 사람이 인간 중심 미래 전환을 돕기 위해서 미래 정치와 국가 거버넌스는 과연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미래사회, 초연결사회, 다중위험사회, 포스트-AI 기술혁명사회라는 주요 미래상과 다변하는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 미래사회

□ 미래 사회변화 속도는 기술,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점차 빨라지고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쫓아가는 것이 거의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상호 연결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예컨대 인구 분야의 변화만 보더라도 급격한 고령화가 초래한 인구 구조 변화 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간 융합, 기후 변화나 분쟁으로 인한 이주, 경제적 목적의 이주 등 복합적 작용을 통해 기존 사회 운영 원리를 재고하게 만든다. 개인의 안녕 그리고 성장과 함께 사회와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를 담아내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는 상설 미래위원회, 정부는 미래기획부 신설 등을 통해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대응 전략 수립 거버넌스를 구축할필요가 있다.

2. 초연결사회

■ 초연결사회는 인터넷,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의 발전 등으로 사물과 인간 그리고 각종 기관 시설 등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보 접근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와 보안 이슈, 갑작스러운 기술 기반 테러나 2차 재난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물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혁신과 초연결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다중위기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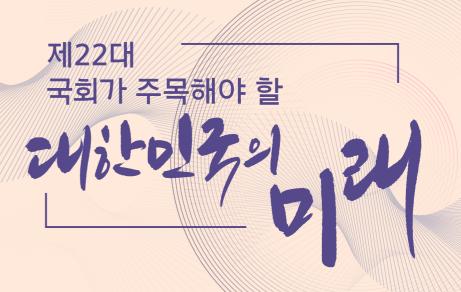
□다중위기, 다중위험 사회는 기후 위기, 국가 간 및 국가 내 분쟁, 각종 재난, 경제 위기, 사회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기후 변화는 다시 인구 이주나 경제 불평등 심화, 갈등과 분쟁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국가와 정치적취약성을 높인다. 이는 어느 특정 국가나 국경 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주변 국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는 초국가적-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인 위험 대응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여러가능한 시나리오 기반의 사회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시민과의미래 대화, 당사자성을 중시한 다중위기 취약계층이나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AI/AX 기술혁명 사회

□ AI/AX 기술혁명 사회는 AI 기술의 혁신, 그리고 포스트-AI 로 불리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를 의미한다. AI와 자동화의 발전은 생산성 증가와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직업과 이를 제어하고 활용한 신기술이 요구된다. 특정 일자리 감소와 함께 AI 문해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과 재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AI 윤리 규범과 인간 중심 활용-통제 수단을 갖추고,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 AI 시대에 맞는 국가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희망과 미래 비전으로 경쟁하는 내일의 정치

- □ 우리나라 정치와 선거에 있어 비전과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선거는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선거 문화는 당장 눈앞의 이익과 현안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 □물론 현안과 단기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골든타임인지도 모른다. 불확실하고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미래이지만, 미래 위기 대응력(회복탄력성)을 갖추어 지속 가능한 미래,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앞장서 제대로 준비한다면 위기가 아닌 미래의 큰 기회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 (끝)



토론 2

양 재 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2대 국회개원 세미나 토론문

양 재 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복지국가 차원에서 보면, 대전환의 도전은 인구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는 생산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의 중가 문제를 가져오고,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의 변화와 함께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대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22대 국회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인구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의 도전에는 경제정책이나 노사관계 정책 측면에서 해법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 □ 인구고령화로 인한 감당하기 어려운 노년부양비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의 재정안 정화 개혁, 의료보장의 지출합리화 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생산인구 감소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고용친화적 복지정책이 대안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등 고용안전망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정책차원에서 논하면 아래와 같다.
 - 1) 먼저 다층체계적 관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효율화 개혁이 필요함.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보험료 인상 및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그리고 기초연금의 선별주의적 보충급여형 기초보장연금으로의 개편이 요청됨.
 - 2) 의료보장제도이 재정효율화 개혁이 필요함. 포괄수가제, 혼합진료의 금지 등을 통해 공급 자의 비급여 확대와 과잉진료 유인을 떨어뜨리고, 개인의료저축계정 등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국민)의 과소비를 줄여야 함.
 - 3)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이 강화되야 함. 전국민 대상 보편주의적인 부모보험의 도입, 질 높은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 기회도 보장해야 함.
 - 4) 전국민 고용안전망과 전국민 역량 배양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함. 교육부와 고용 부의 성인기 학습체제의 통합 (평생학습장학금+국민내일배움카드)해 직업세계와 연관된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고용서비스와 훈련 강화가 이루어져야함.
 - 5) 장기적으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한 고용기반에서 소득기반의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민취업제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소득보장과 함께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해야함.

- □ 정부와 여당은 '약자복지'의 모토하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사회보장을 꾀하고, 야당은 25만원 지원금같은 기본소득류를 포함한 기본사회를 제시하며 보편주의 복지를 뛰어넘으려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약자복지는 대전환기의 도전 과제에 대한 응전으로서는 너무 대상자와 규모가 좁고 약하며, 사후약방문격이다. 반대로 야당의 기본사회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낮다.
- □ 위에서 제시한대로 노인성 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그 연금과 의료지출 증가율을 낮추어 야 한다. 여기서 생기는 재정적 여력을 생산인구의 직업능력 배양과 고용율 증대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의 강화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지속가능하면서도 사회보장에 충실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토론 3

변 미 리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장

대한민국의 미래 세미나 토론문

미래도시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사회적 준비가 필요한가?

변 미 리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장

앞으로 4년 혹은 한 세대 이후의 한국 사회 도시의 모습

- □ 도시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 요소가 새로운 인구구조의 출현과 도시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점은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인구감소와 가구구조의 축소에 따른 초개인주의화를 심화시키고 일상 속으로 들어온 기술이 사람들의 규범이나 가치를 전 면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살아갈 사람들과 한국사회의 도시 공간은 어떤 준비와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 이 세미나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노력의 하나로 이해된다.
- □ 도시의 미래 환경분석을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은 미래 트렌드가 도출될 수 있다. 10년 치 소셜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울의 미래를 '이미 온 미래', '앞으로 가속화될 미래', '확산될 미래', '불확실한 미래'라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분석이다. '가족 가치'와 '개인주의의 변형' 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 정착한 사회변화로 이미 도래한 미래이다. 앞으로 가속화될 미래도시는 '갈등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차별의 심화'될 수 있다. 현재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현상이 사회의 분화와 다양성의 증가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확산될 미래'는 '관계'의 질적 분화가 자리 잡고 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연결성' 부분과 관련하여 '극단적 개인주의화 현상' 또는 '비연속적 관계성'이 단초적으로 보이며 이 현상은 향후 더욱 일반화될 경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미래' 영역은 기술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의한 새로운 개념, 인간성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이이슈로 제기되는 미래이다.

□ 이러한 미래사회 트렌드 도출을 통한 30년 후의 미래도시 서울을 지배할 키워드는 '탈관계화된 축소사회', '다층적 격차사회', 그리고 '방어적 개인주의와 단속(斷續)사회'라는 형상으로 드러났다. 가족 형성이 지체되고, 고령자들이 다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회, 인종 다양성과구조화된 차별이 공존하는 서울, 그러면서 개인들은 공동체적 관계 형성보다는 '일회성' 관계 맺음이 일상화되는 도시이다.

한국 미래세대의 동질성과 차별성

□우리의 미래세대는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갖고 있을까? 한국사회의 미래세대 내부에는 3가지 그룹의 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기존가치를 고수하는 밀레니얼 집단, 사회부족(Social Tribe) 으로 명명할 수 있는 탈가족지향의 자유주의 집단, 불안정하고 개별화된 강제된 소수 집단의 3유형이다. 기존가치를 고수하는 밀레니얼 집단은 남성이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며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사회부족 집단은 중간소득의 싱글, 여성, 자유주의적 가치를 가진 집단이며, 강제된 소수 집단은 저소득층, 1인가구, 중도적 지향을 갖고 있었다. 이들세 집단은 세대 간 갈등과 젠더 갈등이 우리 도시에서 심각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 집단 중 기존가치를 고수하는 밀레니얼 집단과 사회부족 집단은 경쟁주의적 가치는 공유하지만, 가족 가치에서는 대립적이었다. 또한 사회부족 집단과 강제된 소수 집단들은 탈가족가치는 공유하고 있지만, 경쟁주의 가치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 미래세대의 분화된 집단들은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서도 구분되는 차이를 보였다. 기존 가치를 고수하는 밀레니얼 집단은 청년세대의 의견은 언제나 과소대표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참여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물질주의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신뢰한다. 사회부족으로 명명된 신인류집단은 공유경제와 착한소비의 주체이며,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도 있으며, 사회에서 교양시민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물론 물질주의적 지향도 크게 갖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사회변화에서 공공이 주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안정하고 개별화된 강제된 소수 집단은 무기력한 비참여 집단이다. 이들은 기후변화는 나와 별 관계가 없고, 경제적 문제가 삶의모든 것을 지배하고, 공유경제나 친환경기업 소비는 도덕이나 규범이 아닌 경제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포용사회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

□ 한국의 미래도시를 형성할 가치 트렌드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의 특성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미래세대들은 때로는 동질적이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름'의 가치가 '차별'의 가치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용성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경제적 포용성과 사회적 포용성, 공간적 포용성 등 각영역별 포용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생활영역에서의 세밀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토론 4

한 성 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 전략연구소장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토론 요지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 전략연구소장

1. 기조연설: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에 대한 의견

- □ 오늘의 주제인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하여, 기조연설에서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요구되는 국회(입법)활동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고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 □ "따로 또 같이" 즉 정치는 따로, 정책의 같이 라는 솔루션은 무차별적 경쟁이 아니라 선별적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선진화를 이루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사례로 드신 바와 같이 함께하기 어려운 정치 영역에서의 무리한 탕평책의 실패, 공동의 이익을위해 협력해야 하는 정책(예:안보 등)에서의 비협력 등은 국가역량 감소를 초래한다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익 증진이 요구되는 정책 영역에서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가적 위기가 초래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를 지탱하는 2가지의 기반이자 축, 즉 경제적 기반(산업화)과 사회적 기반(민주화) 의 성공의 역사와 더불어 위기 진단 그리고 실패 역사가 주는 교훈은 2가지의 축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경중과 우선순위는 다소 변화될 수 있으나, 산업화에 의한 경제적 기반과 민주화에 의한 사회적 기반이 모두 미래 대한민국에 필요한 필수기반이라는 점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보다는 정책적 성격이 강한 산업화(경제적기반)에 대한 입법 활동은 협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요컨대, 이견이 없고, 국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회의 입법 활동은 따로가 아니라 같이라는 접근 방식으로 추구되길 기대하며, 정치적 행위와 정책적 행위를 논리적으로 분해해 낼 수 있는 지적 전문가집단(Intellectual Expert Group)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발제 1: 미래사회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라는 제하에 발표해 주신 대한민국의 미래 진화 방향에 대한 발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인구절벽의 위기, 점점 심화되는 패권경쟁(특히 기술패권주의), 전세계적 이유인 기후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① 위협 요소들이 가져올 인과 사슬의 견고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예컨대 극한 기상 현상이 경제불평등 심화로 연결되는 고리는 인과성의 측면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대 변화 동인과 사회운영방식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변화 동인에 따라 새롭게 추구하여야 할 가치나 운 영방식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② 국가성장, 경제성장, 효율성이 낡은 사회 운영 원리라고 규정하셨는데, 어떤 논거에서 낡은 원리인지, 거꾸로 개인성장, 환경보존, 형평성이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라고하는 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저의 소견은 국가성장과 개인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효율성과 형평성은 한가지의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아니라 공존하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선후경중이 변화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효율성에 의한 운영 원리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간 한국의 사회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후와 경중이 차이를 보여 왔다는 판단이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요컨대, 본 발제에서 제시된 환경 변화 동인과 영향력,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새로운 가치를 고려한 사회 운영 원리의 도입 그리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한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발제 2: 넥스트 디지털 웨이브에 대한 의견

□ 오늘의 주제인 대한민국의 미래의 측면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보편적 미래 모습 중 하나가 새로운 디지털 혁명(웨이브)에 의한 변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듯이 글로벌 미래 모습을 변화시키는 3대 전환은 패권경쟁/탈세계화에 따른 지정학적 전환(Geo-political Transformation),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그린에너지 관련 전환(Green energy Transformation),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은 최근에 와선 디지털의 총아가 되어 버린 인공지능(AI)에 의한 전환(AI Transformatiom: AX)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 대비한다는 것은 변화의 동인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라점에서 발표된 ICT/디지털 기술의 진화 과정과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의 모습과 최근의 동향 그리고 생태계 역할 변화 등에 대한 발제는 우리의 미래를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공간컴퓨팅, 생성형 AI 등 최근의 기술 동향 및 적용 사례 등은 우리사회의 변화 모습과 산업생태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 발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대한민국의 미래사회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이 AX라는 점입니다. 기술간 융합에도 AI가 활용되며, 산업과의 융합에도 AI가 결합되고, 더 나아가 인간과 AI간의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소위 AI의 일상화가 이미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지능의 확산에 대한 대응이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예컨대 AI기술의 진화는 일상에서 우수한 인간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AGI를 거쳐 인간를 뛰어넘는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하는 ASI로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측면과 더불어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인류의 삶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의 산업진흥 입법과인류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대응/방어/제거와 같은 공공/안전 입법이 균형적으로 필요합니다.
- □ 현재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확보와 관련한 22대 국회 입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6개 법안이 추구하는 가치가 필요 기술개발, 산업진흥, 안전이용, 신뢰기반조성 등 대동소이함에 따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협력을 통한 입법이 진행되길기대합니다.
- □특히 AX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생산요소인 기술의 개발은 그 특성상 대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학습에 요구되는 데이터가 필요함에 따라 자원보유의 한계가 있는 국내실정에서는 생태계내 협력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 따라 생태계내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생태계내 참여자들이 협력하고자 하는 동기(Motivation)를 자극하는 동기부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참여기업, 연구기관, 대학, 진흥기관 등 각 주체들에게 협력이 수익으로 이어지게 하는,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으로서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 예컨대 제가 속한 기관과 같이 공공기술 개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출연연등)들이 생태계 참여자들과 경쟁이 아닌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로서의 입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토론 5

박 세 인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주목해야 할 미래 과제 '초당적 30년 전략'

박 세 인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갈수록 단기 성과에 치중해 장기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정권교체마다 전 정부를 부정하는 정치적 갈등으로 정책적 혼선도 가중됩니다.

〈한국일보 창간기획: 초당적 '30년 전략' 짜자 편집자주〉

탄소중립 시대, 화석연료 이후 에너지원은

정권마다 널뛰는 전력 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자력 발전 비중은 23.9%(8차) → 25.0%(9차) → 32.4%(10차) → 31.8%(11차 실무안)로 문재인 정부(2020년, 9차)에서 윤석열 정부(2023년, 10차) 사이 대폭 상승.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로 분열된 정책 지형 문제.

'탈 석탄' 과제에는 공감대, 원자력-재생에너지 비중의 문제

□탈석탄·재생에너지 지원법 마련. 에너지믹스 관련 지속적 공론화 필요.

토론 5

고령자·이민자… 인구소멸 시대의 과제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 17.4%(2022년) → 34.3%(2040년) → 47.7%(2072년). 207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세·45.8%) 이상. 고 령자 부양 문제·생산인구 감소 문제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

노인 빈곤과 웰다잉

□ 정년연장·폐지·재고용 등 고령자 고용 문제. 은퇴자 도시 등 주거·의료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요양병원 문제 등 '죽음의 질'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 연금·노동 문제는 다른 세대와의 갈등 소지도 있다는 점 고려해야.

피할 수 없는 이민정책 골든아워

□ 2042년 이주배경 인구 404만 명(총 인구의 8.1%) 전망. 불법체류자 문제, 이민자 2세 교육 문제 등 이주배경 인구를 어떤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22대, 국회가 역할 할 때

'정책 리셋' 이제 멈춰야

□ 노무현 정부 '비전 2030' 발표 이후 매 정부마다 비전 작업. 20~30년 내다보는 장기적 과제 지만 평균 5년 주기로 방향 수정하는 문제 봉착. 정부 차원의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 일관성 추구하지만 한계. 국회나 여야정위원회 등 합의기구 논의 거치며 구속력 담보해야.

국회, 미래 논의해야

□ 현재 상임위 체제는 중장기 어젠다 논의하기 힘든 구조. 전반적 과제 논의할 '미래 특위'나 개별 과제별 특위 통해 미래과제에 집중된 논의 필요. 1)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국회 특위에 보고·논의. 2) 국회가 미래 의제에 대한 기본법 제정·기본계획 채택 후 이를 바탕으로 중장 기 정책과제 마련하는 방안.

인구·기후 특위, 몇 차례 열렸나

□ 21대 국회 후반기 기후위기 특위·인구위기 특위 구성. 2023년 2월 첫 회의. 기후 특위는 1년간 6차례, 인구 특위는 4차례 회의. 활동기간 정해진 임시 위원회, 당장 성과 내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 한계. 정부 기본계획 작성 시 특위 보고, 공청회 주관 등 구체적 임무 부여 필요.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발 간 일 2024년 7월

편 집 국회미래연구원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이 책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미래연구원, 2024